# 新경제 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

2021. 5. 13

경제정책본부장 경영학박사 추문갑

## 목 차

- l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- Ⅱ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
- Ⅲ. 현장에서 전하는 新경제3불 문제와 사례
  - 1. 거래의 불공정
  - 2. 시장의 불균형
  - 3. 제도의 불합리
- Ⅳ. 新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

## 1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-

#### 1. 대한민국의 경제구조

**〈법인 사업체수〉 752,677개** 

중소기업 745,686개(99.1%)

중견기업 4,596개(0.6%) 대기업 2,395개(0.3%) 〈종사자수〉 10,374천명

중소기업 6,859천명(66.1%)

중견기업 1,440천명(13.9%)

대기업 2,075천명(20%)

〈총매출액〉 4,987조원

중소기업 1,860조원(37.3%)

중견기업 761조원(15.3%)

대기업 2,366조원(47.4%)

〈총영업이익〉 220조원

중소기업 55조원(25.0%)

중견기업 39조원(17.7%)

대기업 126조원(57.3%)

0.3%의 대기업이 매출의 47.4%와 영업이익의 57.3%를 가져가는 경제구조

- 1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-
  - 2. 대·중기 양극화가 불러온 중소기업 3대 현실

단위 : 백만원

① <b>생산성</b>	하락(자료	: 통계청)
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중기 1인당 매출액은 대기업의 23.8%,1인당 영업이익은 13.1%에 불과



구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1인당	1,141	528	271
매출액	(100)	(46.2)	(23.8)
1인당	61	27	8
영업이익	(100)	(44.3)	(13.1)

- ② 임금 지불 여력 약화(자료: 통계청)
- 대·중기 월평균 임금비교 (대기업) 515만원 VS. (중소기업) 245만원



중기근로자, 대기업의 47.5%

- ③ 투자 여력 약화(자료: KBIZ)
- 대중기 종사자 1인당 R&D 투자규모 (대기업) 307백만원 VS. (중소기업) 79백만원



중기R&D투자, 대기업의 25.7%

- l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-
  - 3. 대·중기 양극화가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



- → 중기 투자여력 약화
- → 중기 성장 지체
- → 중기 근로자 임금 지급 여력 약화
- → 중기 핵심 인력 구인난 및 청년 실업률 악화
- \* 청년실업률(실업자): (20.12) 8.1%(32.2만명), (21.3) 10%(42.6만명)



▶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, 일자리 미스매칭 심화

- l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-
  - 4.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양극화의 원인

[경제3불]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경영애로

한국경제 발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



## 11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 —

5. 「경제3불」 진행경과

#### ※ 중소기업중앙회 경제3불 개념 제시



『2011.10월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』 기조연설

"경제민주화, 3불(거래불공정, 시장불균형, 제도불합리)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."

- 2012년 6월 :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"경제3불 사례" 발표
- 2012년 12월: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야 '경제민주화' 공약 반영

## Ⅱ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 —

- 6. 「경제3불」 통해 일궈낸 사실들
  - 경제민주화의 '헌법적 가치' 재조명 (헌법 제119조 2항)
  -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, 골목상권 시장영역침투, 일감몰아주기 등 민낯을 여론화하여 개선 방안 도출

## 불 례

#### 제 도 개 선

#### 거래 불공정

- · 납품단가 후려치기
- · 기술탈취, 인력빼가기 등

- · 납품단가조정협의권 신설
- ·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(기술탈취)

#### 시장 불균형

- · MRO, SSM등 골목시장침투
- ㆍ 대기업, 외식사업 확장 등

- ·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
- ·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제도화
- · 대기업의 빵집과 MRO 사업 매각
- · 사업조정 대상 확대 등

#### 제도 불합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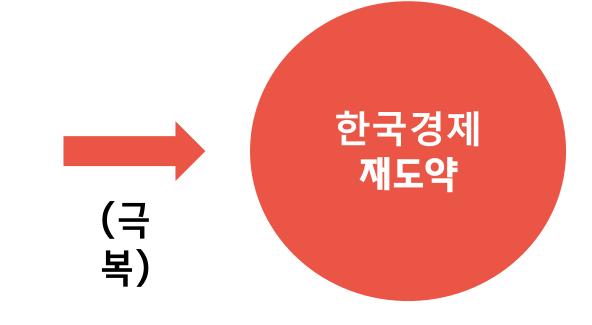
- ㆍ 3대 수수료 문제
- → 신용카드, 은행, 백화점 수수료

- ㆍ 3대 수수료 현실화
- \* 신용카드 : 2%대 -> 1%대
- \*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
- \* 백화점 입점수수료 인하

## 11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 —

#### 7. 기로에 선 한국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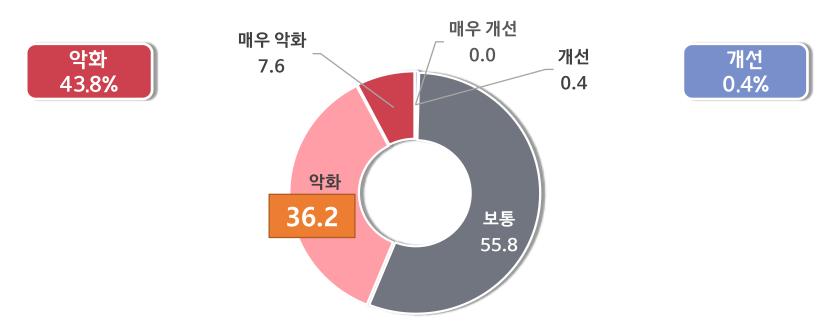
- 저성장 고착화
- 얇아지는 중산층 (고용없는 성장)
- 산업구조 혁신부진
- 세계화의 퇴조
- 미국과 중국 샌드위치



# 대기업만으로 "한국경제 재도약" 불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필수

### 1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-

### 8.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·중소기업 간 양극화 변화 정도



자료: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(중소기업중앙회, 2021.5)

## 중기 43.8%, 코로나19 확산으로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악화되었다고 인식

## 11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 -

- 9. 대변혁의 시대, 2021년의 「新경제3불」이야기
- 한국경제 재도약 :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필요
-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?
  - + 코로나 팬데믹: 경기회복 → K자 양극화 심화
  - + 디지털 전환: 대기업 VS 중기·소상공인 →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
  - + 시장 트렌드 변화 : 오프라인 → 온라인
  - + 경제3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구조적 문제 고착화
    - ex) 음성화된 납품단가 문제,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제도

## "지금 중소기업에겐 혁신 '여력(餘力)'이 없다"

→ 양극화 극복과 혁신 여력 회복 위해 신경제3불 해소 필요

## Ⅱ. 경제3불 진행경과 및 新경제3불 —

10. 과거 「경제3불」과 新경제3불 비교

#### 불공정 방식, 시장 잠식 및 차별 양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

#### 2011년 (경제3불)

## 기래불공정 일방적, 관행적 시장불균형 (오프라인)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제도불합리 은행, 카드 수수료 백화점 입점 수수료

(방식)

(시장)

(양상)

### 2021년 (新경제3불)

거래불공정	형식은 공정, 실질은 불공정
시장불균형	(온라인) 유통시장 확장 → 입점 중기·소상공인 비용부담 증가
제도불합리	조달시장 (최저가 경쟁유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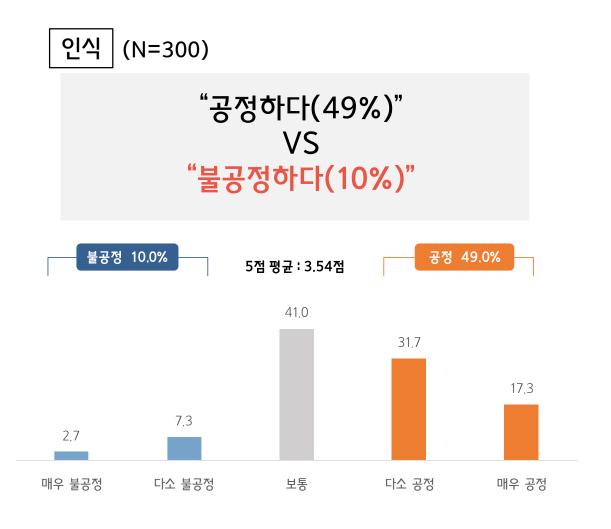
## 경제 3불 "지난10년 크게 변화 없어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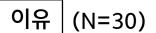
→ 구조화된 문제인 만큼 해소 필요

1. 거래의 불공정 - 개념과 문제

- (현상) 원·하청 기업 간 불공정성 문제로 납품 중기 경영피해 심화
  - \*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 못해 수익성 악화
- (대상) 원·하도급 기업, 위·수탁기업 간 발생
  - \* '19년 수탁기업 비중 : 42.1%, '19년 수탁기업의 모기업 매출 의존도 : 83.3% (자료 : 중소기업실태조사)
- (문제)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성장 지체 초래

#### 1.거래의 불공정 - 원·하청간 거래공정성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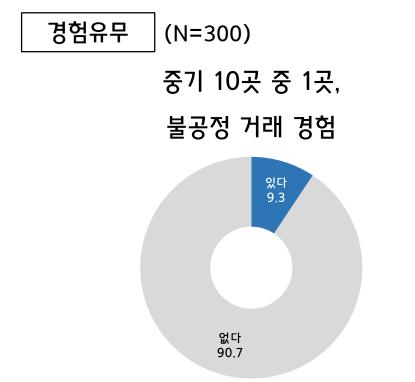




불공정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법·제도 미흡 & 원사업자 노력 부족 "56.7%"



#### 1.거래의 불공정 - 최근 3년간 불공정 경험







\* 일률적(단계적) 납품단가 인하(CR)란? 원사업자의 요구로 납품 中企가 매년 일정비율의 단가를 인하해서 계약하는 행위

"매년 납품단가도 깎아줬는데 납품대금 마저 늦게 받는 이중고 " 겪어

#### 1.거래의 불공정 - 현장 사례

CR(일률적 납품단가 인하)

사례1: 자동차 부품 제조 수급 기업(하청) A 사

- 2016년 1월 초~ 2020년 3월까지 위탁기업 (원청) B 사로부터 부품 제조 및 납품 업무를 위탁 수행
- 2017년 초 위탁기업 B사는 A사에 "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개당 2만원씩 인하"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
- A사는 단가 인하분만큼의 손실을 추후 발주 수량의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B사로부터 보전 받는 조건으로 단가 인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
- 그러나 B사는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, A사는 단 가 인하 분 만큼의 하도급대금의 재차 지급을 요청했으 나 B사는 이를 거절

부당위탁 취소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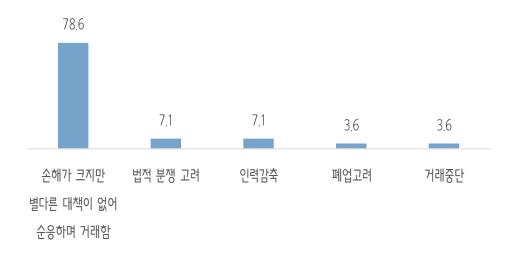
사례2: 동 도금 수급기업 C사

- '17년 1월~ 스마트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 기업 D사는 C사에 동도금 공정을 위탁
  - D사는 일정 부분 물량 위탁을 보장하고, C사에게 자사 공장 내에 생산능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도록 추가 요구
- '18년초 D사는 보장한 물량 중 20~32% 수준만 납품 받은 상태에서, 발주자가 '아이폰X'의 조기 단종으로 발 주를 중단하자, C사에 아무런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
- D사가 C사(수급업자)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C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채,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

#### 1.거래의 불공정 - 대응 및 제도개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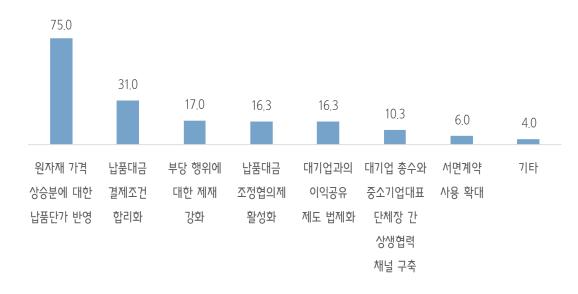
대응

불공정경험 중기 10곳 中 8곳 "손해크지만 순응한다" "분쟁조정·거래중단"같은 적극 대응은 10.7% 불과



####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제

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(75%), 납품대금 결제조건 합리화(31%)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(17%) \*복수응답



- Ⅲ. 현장에서 전하는 新경제 3불 문제와 사례
  - 2. 시장의 불균형 개념과 문제

- (현상) 소수 대기업의 시장 장악 및 이익 쏠림
- (대상) 대형 유통기업+온라인 플랫폼 기업 vs 입점 중소기업·소상공인
- (문제)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,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및 책임 전가

2. 시장의 불균형 - 개념과 문제

- 국내 온라인 시장 → 급성장 중
   (2001년) 3조원 → (2017년) 78조원 → (2020년) 161조원
  17년 만에 23배 성장
  3년 만에 2배 성장
- 전체 유통시장 中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: 46.5%('20년)
-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: 67.5%('20년)

- 2. 시장의 불균형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다변화
  - 시장 확대 :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매출액의 50%이상 나오는 입점기업이 73.9%
  - 다변화: 판매몰에서 중개거래 중심 이동, 전문플랫폼 시장 확대

1세대 종합몰	2세대 오픈마켓·소셜	3세대 온라인 전문 플랫폼		
		패션전문	식품생활전문	배달/숙박
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몰	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	무신사 CONCEPT 29CM 지그재그 ABCY	마켓컬리 Fredit 프레시지 오늘의집	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야놀자 여기어때

#### 2. 시장의 불균형 - 규율할 법·제도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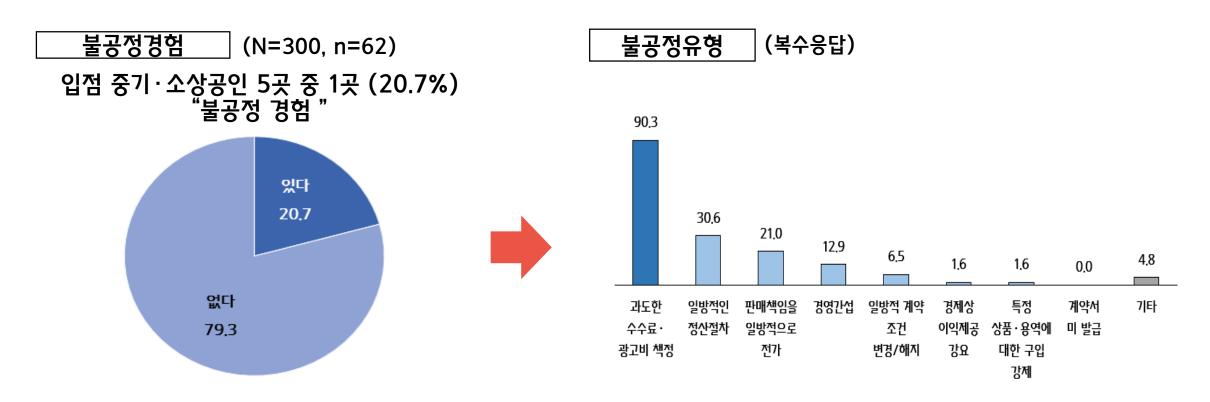
####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공정화를 위한 법률 미비

- · 합의된 서면계약서 부재
- · 상품가격 인하, 우선배송 강요 등 경영간섭
- ·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전가
- · 특정 상품, 용역 구입 강제조건 거래
- · 자신이 직접 판매자 역할 수행, 판매행위 교란
- · 대금지급기한 미준수 및 지연이자 미지급
- · 입점업체간 할인쿠폰, 수수료 등 차별

####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 부재

- · 과도한 수수료, 광고료 책정
- · 입점업체간 할인쿠폰, 수수료 등 차별
- · 정산 내역 일방적 결정 및 세부내역 미공개
- · 전문분야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미흡, 사각지대 발생
- ·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미부여, 협상력 격차 심화

2. 시장의 불균형 - 최근 3년간 불공정 경험



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, 일방적인 정산절차를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

2. 시장의 불균형 - 유통플랫폼사의 불공정 사례

####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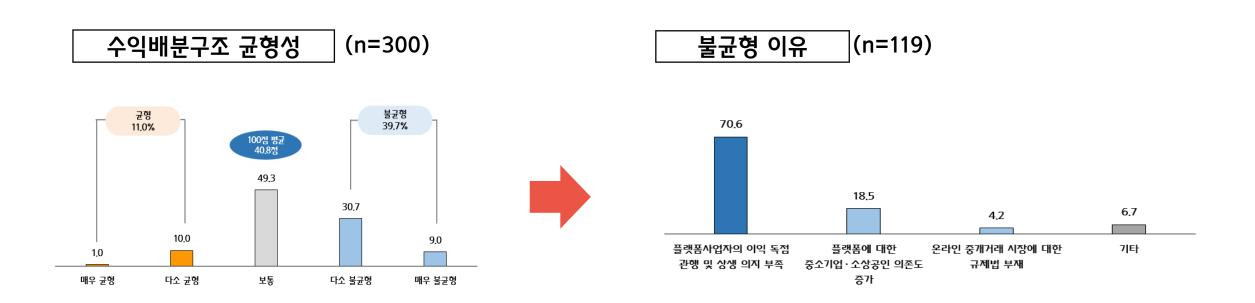
- (사례) 패션전문 플랫폼
  - 수수료를 일반몰의 두 배 받으면서도 판매가 어려움
  - 대기업 브랜드 제품은 수수료도 적게 받으면서 광고를 많이 해주는데, 중소기업 신생브랜드 제품은 수수료도 높고 노출이 안됨
- (사례) 배달앱
  - 노출로 인한 광고비가 너무 비쌈
  - 계약체결 전엔 상단에 노출했다가 계약체결 후에는 광고 순서를 뒤로 변경

#### 책임전가, 부당행위

- (사례) 숙박플랫폼
  -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앱의 자체 판촉방식임에도, 현장에서 컴플레인 발생시 숙박업주가 떠안고 환불해줄 수밖에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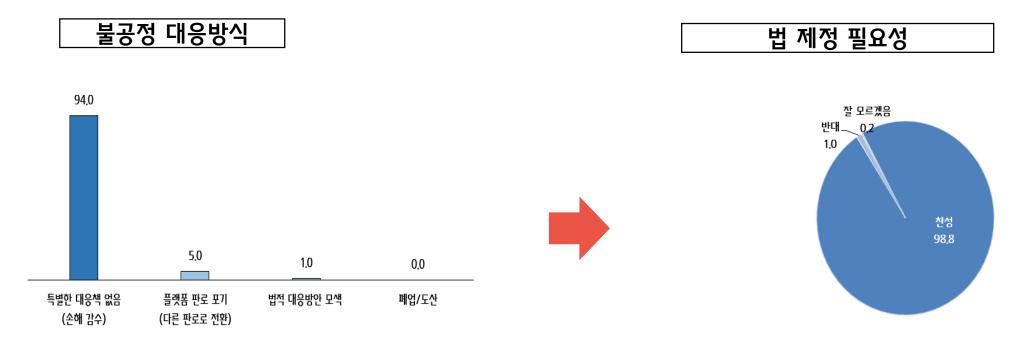
- (사례) 오픈마켓
  - 행사시 할인쿠폰 부가사용을 강요하고, 주문제작상품도 반품요청이 오면 무조건 반품처리하라고 압박

2.시장의 불균형 - 수익배분구조에 대한 인식



'입점 중기·소상공인 10곳 중 4곳(39.7%) 수익배분구조 불균형하다고 인식' 플랫폼사업자의 이익독점과 상생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(70.6%)

2.시장의 불균형 - 플랫폼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응



입점 중기·소상공인 대부분(94%) '손해를 특별한 대응책 없이 감수', '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' 서둘러야

3.제도의 불합리 - 개념과 문제

- (현상)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의미
- (대상) 조달제도(부정당 행정제재가 대표)
- (문제) 최저가격 중심의 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곤란한 구조
  - 조달시장 납품중기 연평균 9.5조원 손해
  - \* 조달가격 사전검증체계 확립방안 연구(2017, 사단법인 아태행정산업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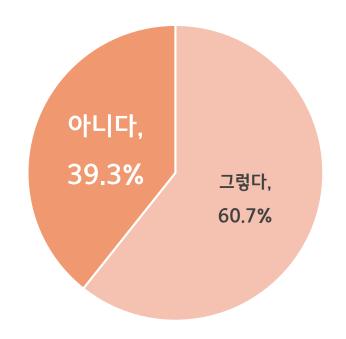
3.제도의 불합리 - 조달시장 현황

- 국내조달시장 규모: 145조원(GDP의 7%)
  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규모: 116조원(75%수준)
- 조달시장의 기능
  - 조달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지원
  - 혁신제품 발굴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  - ・ 미생(未生)단계 중소기업 → 완생(完生)단계 중소기업으로 성장 견인

#### 3-1 조달제도의 불합리 - 중소기업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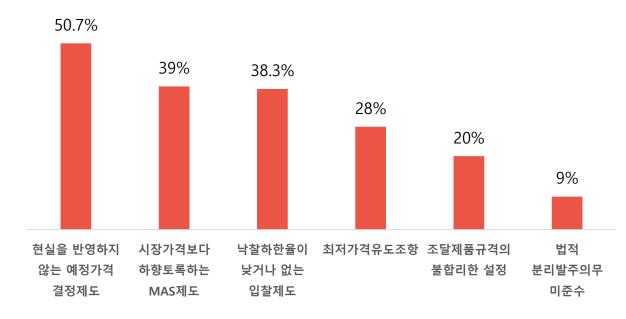
조달제도가 중소기업에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

"조달시장 참여 中企 10곳 중 4곳(39.3%), "합리적이지 않다"



####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달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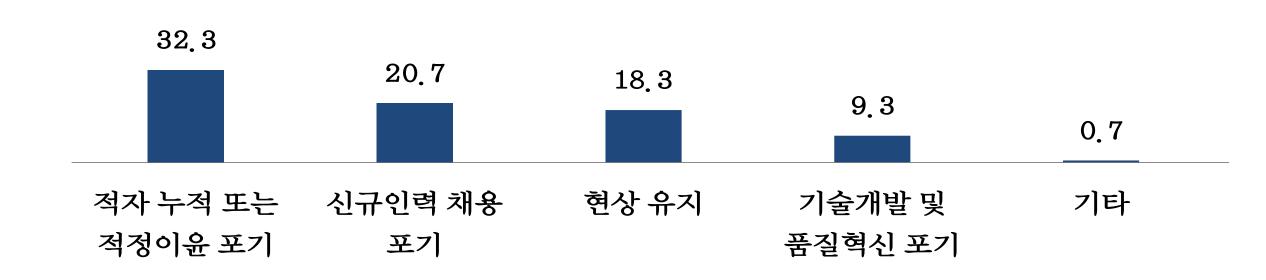
가장 불합리한 조달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"예정가격 결정"(50.7%), "시장가격보다 저가계약을 유도" (105.3%)



※ MAS: 다수공급자계약제도

3-1 조달제도의 불합리 - 피해 유형

"적정누적 또는 적정이윤 포기 피해를 보았다는 조달 중소기업이 3곳중 1곳(32.3%)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"



#### 3-1 조달제도의 불합리 - 현장경험사례

#### 불합리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

- 실제 구매제품보다 낮은 품질 기준 또는 입찰 참여 의사 없는 업체의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발주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입찰 참여 업체가 저가 수주 피해
- 총액계약 발주 시 조달청과 계약한 쇼핑몰 단가보 다 낮은 가격으로 발주금액 산정
- 낮은 발주금액에 이어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어 낙찰 금액이 시중단가보다 훨씬 낮아지는 결과 초래

####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불합리

- 일부 품목은 10년 이상 가격 인상 없이 단가 유지
- 전체 업체의 가격이 오픈되어 있어, 저가경쟁을 유 도할 뿐만 아니라,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 가격 거 래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에 영향을 미침
-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,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달시장에서 차기 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

#### 경미한 사안임에도 무조건 제재함으로써 과도한 기업활동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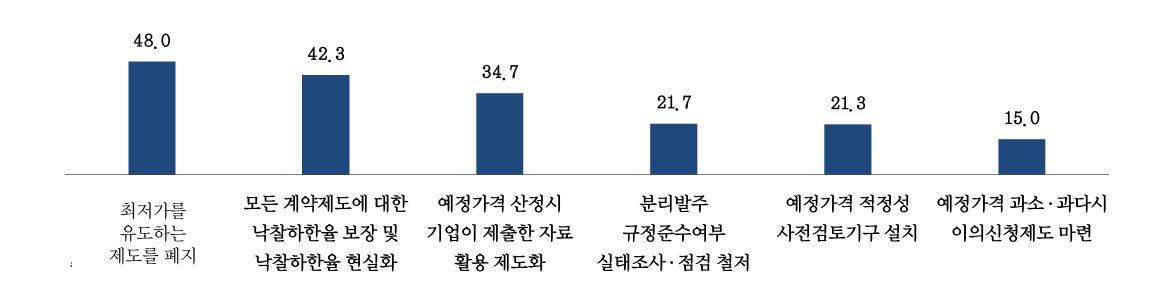
- 공정한 입찰경쟁을 해할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그 경위, 입찰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
- 수요기관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,
  전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
- 국가계약은 입찰의 공정성 ·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일부 삭제('19.9.17) 했으나, 지방계약은 여전히 제재
- \*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다·마·바·사목 등

#### 법적 분리발주 미이행 관행

- 중기간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물품을 직접생산 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를 발주해 야 함에도,
-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업체가 일괄 수주한 후 저가· 저품질의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거나
- 국내 제조업체에게 저가로 납품 요구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유지

#### 3-1 조달제도의 불합리 - 개선과제

## 최저가 입찰관행을 유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, 낙찰하한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적정가격 보장이 가장 시급



# Ⅲ. 현장에서 전하는 新경제 3불 문제와 사례 ─3-2 부정당 행정제재의 불합리 - 개요 및 문제점

• (현황) 공공조달계약시 계약당사자인 발주처가 또다른 계약당사자인 부정당업자에게 법적 제재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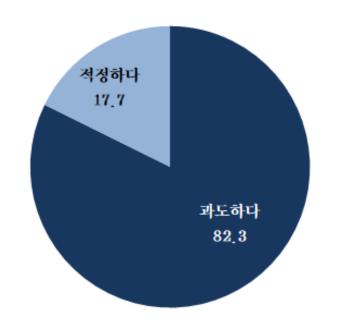
\*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\*지방계약법 제31조

• (문제점)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조치로 기업활동 위축되거나 중단

#### 3-2 부정당 행정제재의 불합리 - 제재 수준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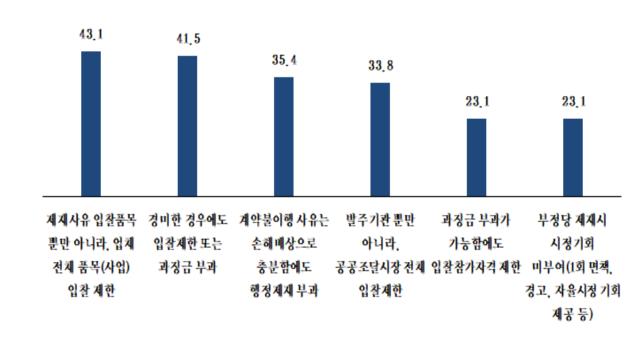
제재수준 (N=79)

부정당 제재 경험 중소기업 10곳 중 8곳(82.3%) 이상 현행 제재 수위가 '과도하다' 생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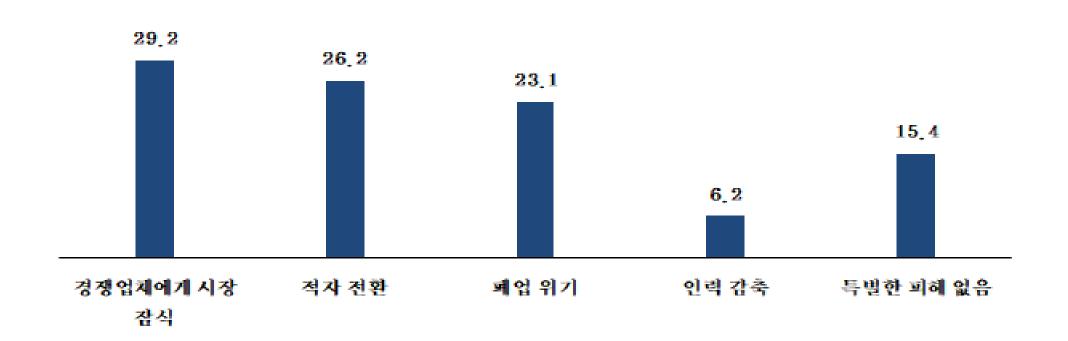
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

제재시 전체품목을 입찰 제한(43.1%)하고, 경미한 경우도 입찰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(41.5%)



3-2 부정당 행정제재의 불합리 - 주요 피해

"과도한 부정당 행정제재로 인해 경쟁기업에게 조달시장을 잠식(29.2%) 당하거나 적자 전환(26.2%) 또는 폐업 위기(23.1%) 직면"



3-2 부정당 행정제재의 불합리 - 제도 개선사항

부정당 제재시 업체 전체가 아닌 해당제품 또는 사업에만 제재(48.1%)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(32.9%)해줄 것을 요구



## Ⅳ. 新경제3불 해소 위한 정책 과제

비전

코로나이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 여력 확보로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, 한국경제 재도약

#### 신경제 3불

#### 거래의 불공정

#### 시장의 불균형

#### 제도의 불합리

-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
- 조정협의 유형에 CR약정을 포함
- ② 납품단가연동제 도입
- 민간분야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 단가에 반영
- ③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
- 상시 감독·조사 시스템 마련

- 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
- 중개거래사업자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
-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- ②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
- 품목별 수수료 등 계약 주요내용 공시
-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세분화
- ③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
- 판매수수료 등 제반 비용 협상권 제도화

- ① 최저가 낙찰 유도 관행개선
-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유도조항 삭제
- 낙찰하한율 상향 및 신규도입
- ②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
- 기초금액 결정시 중기 제출가격 자료참고
-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기구 도입
- ③ 부정당 제재 현실화
- 사안별 경중에 따른 제재 사유를 구분, 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
- 과징금 차등화, 중복처벌 최소화
- ④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
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태조사 강화

#### 10대 과제

